

4월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저소득층·서민을 위한 「희망디딤돌 복지대책」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3월 25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New Start 2008」의 일환으로, 4월 2일(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소득층·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세부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는 3월 25일 있었던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중 저소득층·서민의 생활안정과 관련한 정책의 세부 실천계획과 함께, 올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저소득층·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새롭게 발굴·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책의 주요 방향은 1) 수요자 중심의 틈새보육서비스 확충 2)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3)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 강화 4)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패키지 제공 5) 건강보험료연체시 가산금 부과율 인하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맞벌이 부부나 야간근로 부모를 위해 저녁 7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07년 2,900개에서 올해 4,000개소로 확대되고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통해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육서비스의 틈새가 메워질 예정이다.
- 4월 1일부터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3천명은 건강도우미, 주차단속보조요원 등 월 보수 20만원의 일자리를 얻게 되며, 7월에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을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릴 예정이다.
-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가 강화되어 115천명의 의료급여수급자들은 「만 40세·만 66세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과 「만 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 혜택을 받게 되고, 건강검진기관 지정제가

- 도입되어 국민들이 보다 품질좋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득-일자리-요양서비스」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인계층의 시름이 덜어질 전망이다.
 - 현재 70세 이상 노인의 60%와 65~69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합쳐 약 195만명에게 매월 최고 8만4천원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가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60%로 확대되어 종전보다 106만명 늘어난 301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연체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이 현행 5~15%에서 3~9%로 인하여 체납세대의 부담이 한결 덜어진다.
- 또한 이미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대책도 차질없이 수행하여 저소득층·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보다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적기에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복지정책의 효과를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탄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내실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본적인 소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문병원 제2차 시범사업 추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전문병원 제2차 시범사업 계획을 4월 4일 발표하고,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문병원은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서, 복지부는 2005년 7월부터 2008년 1월까지 6개 과목/4개 질환 21개 병원에 대해 제1차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진료실적, 의료인력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는 있었으나 시범사업의 확대를 통해 체계적인 평가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제2차 시범사업을 08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전문병원 제2차 시범사업은 대상 기관을 확대(21개→30개 내외)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전문병원 제도 확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차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1차 시범사업 때의 획일적인 선정 기준에서 벗어나 과목/질환별 기준을 달리하고, 선정 기준별로 가중치를 설정하여 상대평가를 통해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사업 대상 기관의 수도 1차 때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전문병원 시범기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시 우대, 우수 기관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09년 1월부터 시범사업 기관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2007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는 2007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하였다.
 - '07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우선 '06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금년 2월에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07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기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을 하여 4월 보험료 부과 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된다.
 - ※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전년도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임금 등이 삭감된 경우에는 환급받게 됨.
- 정산결과, 지난해보다 1,994억원 늘어난 10,950억원(992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였다.
 - 정산대상자 992만명 중 소득이 늘어난 635만명은 12,475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줄어든 178만명은 1,525억원을 반환받게 되며, 179만명은 보험료의 변동이 없다.
 - ※ 1인당 평균정산 금액: 110,370원(사업주:55,185원, 본인:55,185원)
 - 한편, 지난해보다 정산금액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직장가입자수 증가에 따른 정산대상인원이 증가(45만명)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금년에 발생한 정산금은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암 등 중증질환진료비, 65세이상 노인진료비, 영·유아 건강검진 등의 보험급여비와 향후 임신출산 도태케어(산전진찰료) 보험급여 확대 추진 재원으로 사용된다.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변경된 보수를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일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보험료가 해당사업장 월 보험료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10회 이내로 분할납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4.15)부터 신청받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년 7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늘(4.15)부터 전국적인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신청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이웃·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리도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시 제출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
 - ※ 신청서는 공단지사 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emcar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어린이집 평가인증! 좋은 어린이집 선택의 첫걸음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07년도 제3기(6.1~14)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총 854개 어린이집 중 532개소(62.3%)가 인증을 통과했다고 발표하였다.
 - 유형별로는 국공립 52개소, 법인 51개소, 직장 6개소, 가정 174개소, 부모협동 1개소, 민간 248개소로, 이들 어린이집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와 인증 현판이 수여된다.

- * 국·공립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 * 부모협동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 민간보육시설: 그 외 보육시설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부모에게 보육시설 선택의 합리적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05년부터 시행한 제도이다(영유아보육법 제30조).
- 평가인증 절차는 국가가 제시하는 평가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①보육시설 자체점검 → ②전

문가에 의한 현장관찰 및 실사 → ③ 자체점검 및 현장관찰보고서 심사에 따른 결과확정 단계로 진행되며, 평가지표는 보육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시설규모 및 운영형태에 따라 21인 이상(7개 영역 80항목), 21인 미만(5개 영역 60항목), 장애아전담(7개 영역 85항목)으로 구분·적용하고 있다.

※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 '08. 3월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46.1%인 13,752개소가 인증에 참여하여 '07년 제3기 참여시설까지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이 중 총 6,042개소가 인증을 통과(참여대비 통과율 74.2%)하였다 고 복지부는 밝혔다.

○ 연도별 인증현황은 ('05년) 622개소 → ('06년) 438개소 → ('07년) 3,482개소 → ('08.4월) 현재 1,500개소로 '07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평가인증제가 보육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09년까지는 모든 시설이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평가인증제도를 더욱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국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에 대한 정보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www.kcac21.or.kr), 중앙 및 전국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www.edu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 4월21일부터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접수

□ 보건복지가족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오늘부터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 설치신고집중접수기간: '08.4.21~'08.5.23

□ 장기요양기관에는 노인이 시설에 거주하며 서비스를 받는 요양시설과 가정에 있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이 있으며, 재가시설에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사업소와, 낮시간이나 혹은 짧은 기간 동안 노인을 보호하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사업소, 노인의 요양에 필요한 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복지용구사업소가 있다.

□ 장기요양기관은 개인, 영리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고, 재가시설의 경우 임대건물*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 주) 재가시설은 임대건물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본인소유 건물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차이가 없으나 임대건물에는 설치가 안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은 16.5㎡의 사무실과 최소인력 2~3명(파트타임도 가능)을 갖추면 사업소의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낮아 새로운 소자본 창업 아이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재가시설은 복합으로 설치하는 경우 사무실이나 인력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병설하는 경우 사무실을(16.5㎡) 함께 쓸 수 있고, 요양보호사 3명이 요양서비스와 목욕서비스를 겸직할 수 있다. 다만,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목욕차량이나 이동용 욕조를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효율적인 설치신고처리를 위해 일제접수기간을 '08.4.21부터 '08.5.23 일까지로 정했으며, 일제접수기간 이후 수시 접수도 가능하다.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대표자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시청·군청·구청)의 노인복지담당부서로 신고서류 및 시설현황, 인력현황, 자격증사본 등의 구비서류(상세내용 붙임2 참조)를 갖추어 신고하면 된다.

□ 한편,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한 기관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시설에 대한 상세정보를 등록 하여야 한다.

■ ■ ■ 질병관리본부, 혈액 위기대응 시스템 가동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혈액업무 관계기관 기관장들이 참여 하는 혈액 안전 및 수급 비상 시 위기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4월 28일(월) 질병관리본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워크숍은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한마음혈액원 등 혈액업무 수행기관과 학계의 전문가가 참석해 범 유행 인플루엔자(PI: Pandemic Influenza)와 같은 전염병 유행이나 재해 발생으로 인한 혈액 안전 및 수급 위기 발생 시 정부·민간·학계 간의 연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혈액 위기 발생 시 각 기관별 개별 대응에서 벗어나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안전한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 휴가 및 방학 기간과 같은 일시적 혈액부족 상황 시 - 약천후나 인플루엔자 발생 등에 따른 단기 혈액부족 상황 시 등 수급 위기 단계별 관리방

안을 마련, 정부·민간·학계 간의 비상 시 긴급연락체계(Hot line 설치, 위원회 운영 등) 구축 운영을 통한 실제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의학 R&D 활성화를 위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계획('08~'17)」수립

□ 정부는 국가 한의학 R&D의 체계적인 육성발전과 정부 부처간의 역할 분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의학 R&D 중장기 육성 발전계획('08~'17)'을 수립, 10년간 총 예산 5,396억원을 투입 할 예정이다.

○ 동 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하여 '07년 12월 20일 한의약육성발전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었다.

○ 계획안 마련에는 보건복지가족부(주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부처·청이 공동 참여하였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키로 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상기계획에 근거하여 부처계획인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계획('08~'17)'을 수립, 부처의 사업목표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한방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의 실용화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등 사업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동 계획은 '08년 2월 21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재수립되었다.

□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계획('08~'17)의 주요내용

○ '98년부터 추진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재기획함으로써 지난 10년간 확보된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과 새로운 한방치료기술 및 한약제제 개발 등 실효성 확보 방안을 도출하였다.

○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은 지난 10여년간 국내 한의학 관련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제품화를 이룰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였다.

- 지난 10년간('98~'07) 정부투자규모는 총 393.4억원으로 연평균 12.6%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연구지원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 신규사업: 한방바이오퓨전연구('05), 한방신약개발('07), 한방의료기기개발('07), 한의약임상연구('07)

- 주요연구성과로는 총 943건의 논문, 157건의 특허(출원/등록)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논문은 '99년 6건에서 '06년 137건, 특허(출원/등록)는 '00년 3건에서 '06년 52건으로 정량적 성과면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계획('08~'17)은 국가계획인 '한의학 R&D 중장기 육성·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부처별 역할을 분담하여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를 통해 제품화·산업화 및 세계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체화하였다.

- 향후 10년간('08~'17) 총 사업비는 2,656억원으로 중장기 육성·발전계획의 투자예산 50%에 해당하며, 사업분야는 '제품화·세계화 구축사업, 근거중심 한의학 구축사업, 혁신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구체화 하였다.

□ 동 계획에서는 각 사업별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성과지표 마련, 주요연구분야의 실행시기 및 소요사업비, 추진전략 제시 및 추진로드맵을 수립하였다.

○ 각 사업별 주요 세부목표로 '17년까지 수출전략형 신약제제 5개, 만성·난치성 질환 한약제제 8개, 한방관련 진단·치료기기 5종, 한의진단(변증, 체질)치료 및 도구 표준화 30건, 한의 임상진료지침 및 임상시험방법론 총 53건, 한약제제 신약개발 임상시험센터, 한약국제화 허브센터 외 4개의 센터 구축 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 향후 동 계획에 의해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제품화 등으로 국민신뢰 회복과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한의학분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